

2010년 사회계열 공공성 [1]번

공공성 실현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중심으로 제시문 (가),(나),(다)는 2개의 기준을 통해 분류된다.

먼저 공공성의 실현 주체가 개인인지 다수인지를 기준으로 (가),(나)와 (다)가 서로 다른 해석을 보인다. 제시문 (가),(나)는 공공성 실현의 주체를 다수로 본다. (가)에서 정부는 이성에 근거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이에 기초하여 사회의 부정적 존재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또한 정부는 외교, 국방, 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공공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국가의 안정, 국민의 편리성과 윤리성을 고취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 타인으로 부터의 악행에 대한 근심이 감소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제시문 (나)역시 다수, 즉 시민 사회가 공공성 실현이 주체임을 보인다. (나)에서 시민 사회의 공론장은 개인들의 집합체로써, 정부의 규제 영역을 축소시키는데 주목한다. 이를 통해 시민 사회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에 모두 걸쳐있는 사회관계를 정부로부터 쟁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시민 사회는 정치적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까지 나아가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제시문 (다)는 공공성 실현의 주체를 개인으로 본다. 이는 (다)에서 이해관계 당사자의 행복의 증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가 개인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을 통해 드러난다. 또한, 공리의 원리는 당사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다수의 행복을 의미하지만, 이것이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때 무의미하다는 것을 통해 개인이 공공성의 주체임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제시문 (가)와 (나)간에도 정부의 개입 정도를 기준으로 (가)는 정부가 많은 영역에 (나)는 최소한의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 차이를 보인다. (가)는 정부가 외교, 국방 뿐 아니라 교육까지 많은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준다는 것을 근거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는 다른 입장인 제시문 (나)는 국가가 사적 영역에 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시민 사회를 통해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이는 곧 정부가 많은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억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1080자]